



## 박정희 정권 시기 언론인의 직업적 정체성의 변화

Changes in Professional Identity of Journalists During the Park Chung-hee Regime

---

저자 (Authors) 박용규  
Yong-Gyu Park

출처 (Source) [언론정보연구 51\(2\)](#), 2014.8, 34-76 (44 pages)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51\(2\)](#), 2014.8, 34-76 (44 pages)

발행처 (Publisher)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468125>

APA Style 박용규 (2014). 박정희 정권 시기 언론인의 직업적 정체성의 변화. *언론정보연구*, 51(2), 34-76.

이용정보 (Accessed) 서울대학교  
147.46.182.23  
2015/12/30 15:05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 박정희 정권 시기 언론인의 직업적 정체성의 변화\*

박용규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ygpark@sangji.ac.kr](mailto:ygpark@sangji.ac.kr)

5·16 쿠데타 직후부터 박정희 정권은 탄압을 가해 비판적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특혜를 제공해 신문사가 하나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했다. 신문의 기업화 과정에서 경영진의 내적 통제가 강화되었지만, 언론인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이런 외적, 내적 통제의 강화로 비판적 논조가 소멸되면서 독자들의 언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형성되었다. 외적·내적 통제 속에 언론활동이 위축되고 직업적 권익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샐러리맨화’되고 있다고 자조하던 언론인들은 현실 타개를 위해 ‘노조결성 시도’와 ‘전문직화 모색’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이런 두 가지 시도들은 정권 및 경영진의 탄압과 언론인의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비록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박정희 정권 시기의 이런 경험들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라는 지사적 언론인 전통의 긍정적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언론노동자로서의 철저한 의식과 전문직주의에 대한 체계적 인식을 종합해 언론인의 바람직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해 주었다.

**KEYWORDS** 언론인 • 지사주의 • 언론노조 • 언론전문직 • 박정희 정권

[ \* 이 논문은 2011년도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이다. ]

## 1. 박정희 정권 시기 언론인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경우 근대 신문이 등장하며 ‘계몽적 역할’이 강조되었고, 식민지 시기와 권위주의 정권 시기를 거치며 ‘언론의 저항성’이 체질화되었다는 평가를 들었다(김규환, 1961; 이상우, 1969a). 즉, 언론의 계몽적, 비판적 역할이 강조되었고, 신문은 일종의 정론지(政論紙)적인 특성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이렇듯 근대 신문 등장 이후 언론의 계몽적, 비판적 역할이 주장되면서 ‘지사(志士)적 언론인’의 전통이 강조되었고, 정론지적 특성이 남아 있던 1950년대까지도 언론인들은 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지사적 특성’을 어느 정도 보였다고 평가되었다(장은미, 2007, 98~107쪽; 최이숙, 2009, 173~180쪽).

1960년대 중반부터 신문들은 대중지적 성격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서구사회와는 달리 정부의 개입이 신문의 상업화 과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주동황, 1993).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는 한편 특혜도 제공하면서 신문의 상업화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렇듯 신문의 정론지적 특성이 사라지고 상업적 대중지로 변모하면서, 객관보도가 강조되고 언론인의 ‘기능인화’가 이루어졌다(유선영, 1995, 112~121쪽). 이런 과정은 곧 정권의 언론탄압에 의해 언론인이 비판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런 변화 속에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직업적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며 ‘언론자유 수호’, ‘권익 옹호’, ‘자질 향상’을 앞세운 활동을 해나가기 시작했다. 결국 정권의 언론탄압과 신문의 상업화는 언론인의 특성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박정희 정권 시기는 한국 언론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 언론정책이 오늘날과 같은 한국 언론의 구조와 특성이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신문사들이 정권의 통제에 굴복한 가운데 특혜에 힘입어 기업화되었고, 언론인들도 탄압에 무릎 꿇으며 직업적 안정성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경향은 유신체제를 거치면서 한국 언론 구조와 언론인의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한국 언론인이 자랑스럽게 내세

우던 '지사(志士)적' 언론인의 전통이 무너지면서, 초보적인 수준의 '언론노동자로서의 자각'이 나타나기도 했고 부분적으로 '언론인의 전문직 주의'가 모색되기도 했다.

이글은 바로 이러한 박정희 정권 시기 언론구조의 변동과 이런 변화과정 속에서 나타난 언론인의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언론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60년대 언론인의 직업적 정체성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언론인도 갈수록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오늘 날과 같은 정체성이 형성되는 데 중요한 시기였던 박정희 정권 시기 언론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961년의 5·16 쿠데타 이후부터 1972년의 10월 유신체제 수립 이전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언론인의 직업적 정체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 시각을 정리할 것이다. 3장에서는 언론인의 직업적 정체성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박정희 정권의 언론정책, 신문 산업의 변화, 독자들의 비판적 인식의 형성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4장에서는 언론 환경의 변화와 지사주의의 쇠퇴, '샐러리맨화'에 대한 자조와 노조 결성 주장, '전문직화' 표방과 자질 향상의 필요성 주장 등 언론인의 직업적 정체성의 변화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이렇듯 신문의 성격 변화와 언론인의 직업적 정체성의 변화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문에 대한 정책이나 신문 산업의 변화를 먼저 3장에서 논의하고, 이에 영향을 받는

---

1 '지사(志士)'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 몸을 바쳐 일하려는 뜻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전적 뜻을 갖는데(<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5691600>), 흔히 '애국지사, 우국지사, 독립지사, 항일지사' 등 다양한 단어들 붙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지사라는 단어는 '계몽적, 비판적, 저항적 지식인'이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사적 언론인'이라는 표현에는 언론인이 바로 '계몽적, 비판적, 저항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막부 말기 "신분이 아니라 뜻(志)"에 의해 '횡적'으로 연결되어 '쇼군'이 아닌 '천황'에게 '충적'으로 충성을 한 집단을 지사(志士)라고 불렀다(장인성, 1999, 264~266쪽).

언론인의 직업적 정체성의 변화를 4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5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박정희 정권 시기 언론인의 직업적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 2. 언론인의 직업적 정체성 변화에 대한 연구 시각

서구사회에서는 17세기에 근대 신문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18세기에 신문에 대한 정치적, 법적 제약들이 완화되면서 신문이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했다. 19세기 중반 이전까지의 신문들은 대체로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론지(政論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근대시민사회의 성립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앞장섰던 신문들은 점차로 다양한 세력들의 정치적 대립과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런 정론지들은 주로 특정 독자층의 구독료나 후원금에 의존해 발행되며, 다양한 독자층을 확대하려는 시도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Smith, 1979/1990, pp.141~175).

미국과 영국에서는 19세기 중반에 들어서서 신문이 발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으로 판매시장과 광고시장이 확대되면서 점차 특정 정당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정론지 또는 정당신문의 성격을 벗어나서 상업지적인 성격을 지닌 대중신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대중신문의 등장을 예고했던 ‘염가신문(penny papers)’ 시대를 거쳐(Hallin, 1985, pp.127~129)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뉴저널리즘과 ‘황색언론(yellow journalism)’으로 대표되는 본격적인 대중신문 시대로 돌입했다. 영국의 경우 19세기 중반 인지세가 폐지되면서 대중신문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신문의 기업화가 촉진되었다(Curran, 1979, pp.109~146). 신문들이 정치적으로 자유를 획득하면서 대중신문으로 발전했지만, 신문의 기업화와 함께 이제는 경제적 통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정치적 주장’에 치중하던 신문이 이제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는 단계를 거쳐 ‘이윤추구’에 집중하는 단계로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했다(Dicken-Garcia, 1989, pp.223~228). 상업적인 대중신문이 발전하면서 편집인의 주관적 견해를 위주로 하여 정치적인 여론 선도에 치중하던 ‘의견신문(opinion paper)’의 전통은 급격히 퇴조했다(Smith, 1979/1990, p.260). 즉, 상업주의적인 대중신문이 발전하면서 보도의 객관성이 기자들의 직업이념으로 정착되어 나갔던 것이다(Schiller, 1979, pp.46~57). 대중신문들은 특정한 입장에서의 ‘정파적 의견’의 제시보다는 ‘객관적 사실’의 전달을 통해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대중신문이 발전하면서 언론인들은 정론(政論)을 펼치는 문필가로서의 비판적 기능을 상실하고 신문기업의 사적 이익 실현을 위한 기능적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었고, 신문도 ‘공공영역(public sphere)’으로서의 기능을 점차로 상실하게 되었다(Habermas, 1987, pp.181~195). 즉 ‘독립적인 사건의 해석자’였던 언론인이 대중신문의 발전에 따른 객관보도의 등장과 함께 독립성을 상실하고 ‘뉴스전달 과정의 기술적인 한 부분’이 되었던 것이다(Carey, 1979, p.32). 대중신문이 등장하면서 비판적 지식인들의 문필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던 언론 활동이 이제 직업적 기자들의 전문적 취재보도활동으로 변화되어 나갔고, 이런 활동들은 신문기업의 이익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sup>2</sup>

상업적인 대중신문들의 등장에 따른 직업적인 기자들의 출현은 발행인으로부터 편집인이 분리되고, 다시 기자가 분화되어 나갔던 ‘전문화(specialization)’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Nerone, 1987, pp.397~398). 이런 분화과정을 통해 상업주의적인 목표에 치중하는 경영진과

---

2 서구사회에서 대중신문 등장 이전의 언론인들에 대한 평판이 반드시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인쇄업자 출신의 언론인들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대단히 부정적이었다(Fedler, 2000, pp.12~14). 미국의 경우 유럽 국가들에 비해 지식인들의 문필적 활동으로서의 언론활동의 전통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점도 이런 평가를 낳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는 편집진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Tunstall, 1974, p.25). 경영진이 일종의 산업으로 신문의 이익에 치중했다면 언론인들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로써 신문의 가치에 중점을 두면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다(Hart, 1980, p.268). 즉, 서구사회에서의 기자직은 노동과정에서의 자율성 확보, 기자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신뢰의 확보, 공개장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 등이 언론 조직의 이윤 극대화라는 경영상의 요구와 대립하고 갈등하는 과정을 통해 성격이 규정되었다(강명구, 1993, 164쪽). 이리 과정에서 언론인들은 노조를 만들어서 경영진에 대항하기도 했고, 전문직으로서의 특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들을 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미국이나 영국에서의 언론의 역할 및 언론인의 특성의 변화과정이 유럽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Mancini, 2005; Schudson, 2005). “영미모델이 언론의 기능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균형 있게 전달하는 데에 둔다면, 유럽모델은 정당과의 강한 연계에 근거하고 있어서 이념적, 정치적 지향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언론인의 특성도 전자의 경우 직업적 자율성을 갖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후자의 경우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뛰어난 문필가적 활동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임영호, 2007, 240~244쪽). 상대적으로 영미계통의 언론인들이 독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적인 전문직으로서의 언론인상을 갖고 있었다면, 유럽의 경우에는 여전히 독자들을 상대로 정론(政論)을 펼치려는 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언론인상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개화기와 식민지 시기를 겪었던 한국의 경우 서구보다도 언론인의 ‘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자들의 이상형은 ‘지사’라고 할 수 있고, 지사로서의 기사는 사회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다양한 의견의 존재를 알리는 ‘전달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스스로가 사회의 나아갈 길을 알리고 가르치는 ‘계몽자’ 또는 ‘비판자’로서의 성격이 더 강했다고 할 수 있다(강명구, 2013, 515~516

쪽). 이렇듯 오랫동안 지사적 언론인이 이상적인 언론인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역사적 특수성’ 때문이었다. 언론이 개화기에는 ‘반외세·반봉건’, 일제강점기에는 ‘항일’, 해방 이후 한동안은 ‘이데올로기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이상우, 1969a, 17~18쪽), 언론인의 역할도 계몽과 비판에 중점이 두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지적 전통’도 언론인의 지사주의가 형성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천관우는 전통사회의 이념이었던 유학과 근대사회의 새로운 현상인 저널리즘이 사학을 매개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구한말의 저널리즘은 ‘사학-경세학(經世學)-저널리즘’의 매개 위에 성립되었다고 주장했다(천관우, 1971, 34~35쪽). 이것은 개화기의 언론인들 중 상당수가 유교적 전통에 입각한 현실참여의 한 방법으로 언론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들이 언론인이며 동시에 역사가이자 민족운동가였던 ‘지사적 언론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런 지사적 언론인의 전통은 천관우, 송건호 등으로 이어졌고, 이제 언론인은 역사가이자 민주화운동가로서 활동하였던 것이다(김영희·박용규, 2011).

이런 지사주의적 언론인의 전통이 1950년대까지 계속되다가 1960년대 이후 급격히 변화되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정권의 통제가 가해지고 특혜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신문의 정론지적 특성이 사라지고 대중지로 급격히 변모하였으며, 언론인의 특성도 급격히 변화되어 나갔던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의 개입이 언론의 성격과 언론인의 특성이 변화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서구와는 다른 점이었다. 따라서 신문의 상업화뿐만 아니라 정권의 언론정책도 고려하며 언론인의 직업적 정체성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정책과 신문산업 등 언론의 전반적인 변화 과정 속에서 언론인의 직업정체성이 ‘지사에서 ‘샐러리맨’, ‘전문직업인’, ‘언론노동자’ 등으로 변화되어 나간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3. 박정희 정권 시기의 언론 현실과 언론인

#### 1) 통제의 제도화와 특혜를 통한 포섭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은 반공주의와 경제개발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강력한 언론통제를 시도했다(김남석, 1994, 70~71쪽). 군사정권은 반공주의를 통해 신문의 비판적 활동에 대한 억압을 제도화하는 한편 “통치심볼로 내세운 근대화 내지 경제발전계획의 수행과정에서” 언론을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 동원하기 위한 언론정책을 전개했다(김언호, 1977, 129쪽). 먼저 군사정권은 5·16 직후 일부 신문사 폐간과 기사 구속을 강행했고(조세형, 1964, 26~27쪽) 계속해서 포고 11호와 공보부령 1호를 적용하여 언론사 정비를 단행했다(주동향, 1993, 66~67쪽). 사이비 언론정비라는 명분으로 언론에 대해 기선을 제압하는 탄압을 가했던 군사정권은 1962년 6월에 5개항의 언론정책과 7월에 그 시행기준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결국 반공주의에 근거해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적 성장을 지원하여 언론을 정권유지의 도구로 동원하겠다는 것이었다(김해식, 1994, 100~102쪽).

군사정권은 이미 1962년 9월에 언론탄압적 요소가 있는 반공법을 제정한 바 있고 민정이양 직전인 1963년 12월에는 ‘신문,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여기에는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이 규정되어 있었고 등록, 취소와 발행정지 처분이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은 1964년에 6·3 사태가 확산되자 언론을 더욱 강력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언론윤리위원회법이라는 언론탄압법을 제정하려 했지만<sup>3</sup> 언론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동법의 시행이 유보되었다.<sup>4</sup> 이후 박정희 정권은 언론윤리위원회

---

<sup>3</sup> 박정희는 1964년 6월 26일 국회에서 행한 ‘시국수습을 위한 특별교섭’에서 ‘언론만의 자유’로 ‘국가안정이 침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유재천, 1986, 19~20쪽). 이것은 6·3 사태의 발생에 언론의 영향이 컸다는 주장이었다.

소집에 반대했던 신문들에 대해 탄압을 강화하여, 1966년 1월 25일에 『경향신문』을 강제경매 처분시켰고, 1967년에는 거액의 차관 특혜제공으로 『조선일보』의 논조를 위축시켜 놓았으며(박인규, 1989, 213~214쪽), 1968년에는 ‘신동아 사건’으로 『동아일보』를 굴복시켰다.<sup>5</sup>

한편 박정희 정권은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을 전후하여 기관원들을 언론사에 상주시켰는데(이상우, 1969a, 90~97쪽) ‘정보기관의 신문사 출입기자’라고까지 불리던 이들 기관원들은 특정 사실의 보도 여부나 기사의 크기까지 정해 줄 경우가 있을 정도로 보도내용에 개입했다(손주환, 1970, 21~22쪽). 또한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언론인에 대한 연행, 구속, 테러가 빈발했고 이는 결국 언론계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취재보도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강성재, 1986, 410쪽). 기관원 상주를 통해 취재보도 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것은 일종의 사전검열로서 과거와는 달리 사전적 통제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유신 체제가 성립되면서 언론인에 대한 통제는 더 강화되어, 비판적 논조를 보인 언론인에 대한 연행과 테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렇듯 정권의 통제가 강화되었던 이 시기가 바로 언론인에게 “무력감으로 인해 직업인으로서 가장 고통스런 시절”이었던 것이다(남시욱, 1997, 218쪽).

한편 박정희 정권은 경제적 특혜를 제공하여 언론이 급격히 기업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섭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언론이 국가의 특혜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언론을 국가의 통제권 내로 끌어들이고, 장기적으로는 언론이 기업적 성장에 집착

---

4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은 동법 제정반대 투쟁과정에서 대부분의 신문발행인들이 정권에 굴복했고 첩제가 아닌 정권의 ‘시혜성 시행 보류’로 매듭지어지면서 언론이 권력에 굴복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송건호, 1990, 144쪽). 결국 동법 시행의 보류는 ‘패배가 유보된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5 신동아 사건은 3선 개헌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의 언론기업이 『동아일보』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권력에 굴복했음을 알리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부영, 1983, 284쪽).

하게 함으로써 언론이 상업주의화, 탈정치화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김해식, 1994, 127~132쪽). 특히 박정희 정권은 언론사 정비와 시설기준의 적용으로, 신문사의 독과점적 구조를 구축한 이후 신문사에 대한 경제적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신문의 기업적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먼저 박정희 정권은 신문에 대해 수입용지 관세율을 30%에서 4.5%로 낮추는 특혜를 베풀었고(문종대, 1990, 196쪽) 국내생산용지도 시중가보다 싸게 살 수 있도록 통제를 가했다(신문협회, 1982, 240~241쪽). 또한 박정희 정권은, 고속 운전기 도입이나 사옥의 신축 등 신문사의 시설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차관이나 용자의 형태로 제공해 주었다(김해식, 1994, 129~130쪽). 나아가 박정희 정권은 저리의 장기대출을 신문사에 알선해주어<sup>6</sup> 신문 경영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한국신문협회, 1982, 503~504쪽). 결국 신문에 대한 지원과 특혜는 언론을 회유하고 포섭하려는 것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특혜에 의존하게 된 언론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은 신문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언론인에 대해서도 탄압을 가하는 한편, 특혜를 베푸는 정책을 실시했다. 박정희 정권은 1962년의 언론정책 시행기준에서 ‘보수 기준’을 정해 신문사들이 기자들의 임금을 올리도록 했다. 또한 언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이나 언론인의 친목도모와 연구활동을 위한 신문회관의 설립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곽복산, 1968, 352쪽). 또한 박정희 정권은 언론인을 관료나 국회의원으로 충원하였는데, 이는 언론인의 권력 지향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강명구, 1993, 139~143쪽).

유신체제 성립 이후 각 부처의 대변인, 해외공보관, 유정회 국회의

---

65·16 군사쿠데타 세력의 일원으로 당시 서울신문사 사장을 맡고 있던 양순직은 시설투자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해서도 용자가 제공되어야 하며 기존의 은행 부채에 대해서도 상환 압박을 완화시켜주어야 하며 나아가 용자 외에 정부의 보조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양순직, 1962, 109쪽). 이런 주장에서 나타난 내용들은 거의 그대로 시행되었다.

원 등으로 언론인들이 대거 발탁되면서 언론인들의 권력지향성이 심화되었다.<sup>7</sup> 1950년대부터 관행화되었던 촌지수수 문제와 함께 1970년대부터 노골화됐던 언론인들의 권력지향성은 언론인의 직업윤리의식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언론의 독립과 자율성 확보,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위해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강명구, 1993, 167쪽). 즉 외부로부터의 구체적인 통제 없이도 신문이 스스로 권력에 대해 ‘눈치보기’식의 보도를 하는 관행이 이 시기부터 본격화되었던 배경에는 경영주의 권력에 대한 굴종뿐만 아니라 기자들의 권력지향성도 크게 작용했던 것이다.

## 2) 신문 산업의 성장과 직업적 불안정성

군사정권의 언론사 정비로 과점적 구조가 이루어진 후 1962년에 결성된 신문발행인 협회가 구독료, 광고요금, 지면증면 등에 있어서 담합을 하게 되면서 신문들은 과점적 이윤추구가 가능하게 되었다.<sup>8</sup> 또한 박정희 정권이 건전 언론기업 육성이라는 명분하에 신문에 대해 세제와 금융상의 경제적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신문의 기업적 성장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런 과정은 곧 “한국 언론의 상업화가 정치적 순치의 대가로 주어졌거나 최소한 정치적 통제에 직면한 언론사주와 경영진들의 사업적인 전략과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이정훈, 2013, 324쪽).

---

<sup>7</sup> 1970년대 후반에 기자들의 관계나 정계로의 발탁이 빈번하던 상황에서 한 신문사의 편집국장은 기자를 채용할 때, “기자직을 발판으로 전직을 하려면 아예 신문에 들어오지 말고 만 직업을 택하는 게 현명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오소백, 1978, 313쪽). 이것은 ‘대기자의 꿈’보다 기자직을 발판으로 전직하려는 현실적 판단을 하고 있는 기자들이 매우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기자들이 언론인으로서의 비판적 사명을 제대로 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sup>8</sup> 장용호는 신문 산업의 경우 시장에 의해 자본축적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가격과 비용의 담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장용호, 1995, 35쪽). 그러나 담합구조가 일차적으로 군사정권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권의 경제적 특혜 제공과 더불어 신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여건, 즉 광고시장과 구독시장의 확대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즉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제조업의 급격한 발달은 전국적인 내수시장을 형성했고, 이에 수반하여 광고시장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었다. 특히 1960년대 말부터 과잉 생산되었던 소비재의 수요창출의 필요성이 생기면서 광고시장은 더욱 확대되었는데, 1970년의 주 36면에서 48면의 증면도 이러한 광고시장의 확대와 관련된 것이었다. 한편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는 구독시장의 급속한 팽창을 가져왔고, 이는 대규모 신문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전국신문 총 발행부수가 1960년에는 80만부에서 1965년에는 120만부로 늘어났고 다시 1970년에는 200만 부로 늘어났다(주동황, 1993, 83쪽).

또한 1960년대에 신문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는 1965년에 상업주의를 표방한 『신아일보』와 삼성재벌을 배경으로 한 『중앙일보』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특히 『중앙일보』의 등장은 복합기업화가 본격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sup>9</sup> 이에 따라 신문들의 경영전략도 더욱 성장 위주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신문들의 자본금과 매출액 규모도 증가했는데, 먼저 중앙지 평균자본금을 보면 1955년에 비해 1964년의 20배 이상 늘어났고, 다시 1964년에 비해 1967년에는 7.7배나 늘어나게 되었다(임근수, 1969, 23쪽). 또한 1960년대에 전체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8~10% 정도였지만 신문기업들의 매출액 성장율이 20%정도나 되었다(주동황, 1993, 105쪽).

그리고 신문들은 인쇄시설, 사옥, 판매망 등의 확충을 위해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였고 확충된 인쇄시설을 활용한 다각경영 방식도 시도하게 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신문들은 확충된 인쇄시설을 이용한 잠지발행에 나섰다. 1964년의 『주간한국』을 시작으로 1968년에는 5개의 주간

---

<sup>9</sup> 1966년에는 국내 30대 기업 가운데 8개사가 언론사를 소유하게 되었고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 가운데 4개사가 재벌의 소유였다(김학준, 1966, 87쪽).

지가 동시에 발행되었다(지재원, 1988, 272~273쪽). 특히 1969년 최초의 책자형 주간지였던 『선데이서울』은 선정적인 내용으로 높은 판매 부수를 자랑하며 신문사의 수익증대에 크게 기여했다.<sup>10</sup> 결국 이러한 주간지의 발행은 신문의 상업주의적 동기와 국민들에 대한 권력의 탈정치화 의도가 맞아떨어진 경우였다(김해식, 1994, 243쪽). 이렇듯 다각경영을 통해 매출액이 늘어났음에도 1960년대에는 순이익을 크게 남기지는 못했다. 이것은 사옥이나 시설투자 등에 대한 과도한 투자 때문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이를 토대로 매출액의 성장뿐만 아니라 순이익도 점차로 늘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신문들이 급격히 기업적 성장을 했던 1960년대 후반에도 지방에는 무보수기자들이 있었고, 서울 주요 언론기관의 임금 평균치도 은행이나 일부 기업체 사원의 50%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또한 전국 언론인들 중에서 60% 이상이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만을 받았을 뿐이다(한국기자협회, 1994, 348~355쪽). 1970년대 중반 이후 임금수준이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일부 기자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 1970년대 말에 가서야 기자들의 임금수준이 더 올라가면서 타 업종과의 격차가 줄어들어 갔다.

신문 산업의 성장 속에서도 경영진은 상당 기간 동안 임금을 올리는 않았지만, 편집진에 대한 통제력은 급격히 강화해 나갔다. 정권의 임금인상 권고가 있었고 매출액도 증가해 다소 여력이 생겼음에도 경영진은 기자들에 대한 임금을 크게 올려주지는 않은 반면에, 과거의 ‘동지적 유대의식’을 저버리고 편집진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던 것이다. 정권의 특혜 제공이 비판적 논조의 소멸을 목표로 했던 것인 만큼, 저항적 언론활동을 하려는 기자들에 대한 경영진의 통제 강화는 당연한 것이었다.

또한 신문의 기업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진이 기자들의

---

<sup>10</sup> 1960년대 후반의 주간지 붐은 텔레비전의 급격한 보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신태민, 1970, 31쪽). 이것은 주간지의 판매부수 확장이 텔레비전의 보급과 함께 대중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주장이었다.

직업적 권익을 무시하는 경향도 강했다(이목우, 1969, 50쪽). 1964년에 이미 ‘경영주의 비유’를 건드리거나 ‘정치권력의 미움’을 사서 언론계를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조세형, 1964, 28쪽) 점차로 경영진이 기업적인 이윤추구에만 집착하게 되면서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으로 기자들을 해고하거나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한국기자협회, 1994, 358~363쪽). 이것은, 편집에 대한 경영의 절대적인 우위가 확보되었고 여기에 권력의 영향력도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빈번했던 해고 등의 부당한 인사 조치는 기자들의 언론노동에 대한 자본의 통제력이 강화됐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임금인상투쟁을 억제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했다.<sup>11</sup> 특히 1975년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의 기자 대량해직 사태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되어 나타난 결과였던 것이다.

### 3) 비판적 논조의 순치와 독자들의 거센 비판

군사정권은 1962년 6월에 기존의 조·석간제를 단간제(單刊制)로 바꾸도록 했는데, 이것은 결국 정치기사를 줄여 신문의 정론(政論)성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비판적 논조를 위축시키려는 것이었다(천관우, 1962, 198~199쪽). 이렇듯 단간제 실시를 포함하여 군사정권의 다양한 위압적 언론탄압 조치에 의해 신문의 논조는 급격히 위축되었다. 5·16 직후 신문이 얼마만큼 위축된 논조를 보였는가 하는 것은, 박정희 당시 최고회의의장이 “언론인들이 혁명정부를 두려워하여 비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개가 부족한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짐작할 만했다(이상우, 1975, 17쪽). 이러한 논조의 위축은 군사정권이 언론기업 육성을 위해 특혜 제공과 함께 언론 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신문들도 정부 비판적 논조를 통해 판매수입을 증가하려는 시도를 하기

11 최규장은 “임금인상투쟁을 못 벌이는 것을 보면 저임금을 감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명인으로서의 긍지로 족하겠다는 것도 아니며 기업주의 해고라는 견제 수단에 부딪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최규장, 1972, 54쪽).

보다 정권의 경제적 특혜에 의존하는 안정적인 기업화를 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부 신문들은 1964년 6·3 사태가 발생하면서 “군정시대에 억눌렸던 울분, 그리고 정권주체에 대해 품어왔던 막연하나마 일반적이었던 불신, 혐오감” 등이 작용하여 비판적 논조를 보이기도 했다(이상우, 1975, 18~19쪽). 그러나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을 통해 신문 경영진들이 권력에 굴복하면서 급격히 논조가 변질되기 시작했다.<sup>12</sup> 이미 1965년에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를 제외한 나머지 신문들의 경우 이전 시기에 비해 비판적 논조는 급격히 위축되었던 반면에, 찬성과 지지의 논조는 크게 늘어났다(최준, 1965, 274쪽). 한편 1965년 『신아일보』와 『중앙일보』가 창간되어 상업주의적인 경쟁이 가열되자, “보도 면에서는 방자한 방종의 극을 달리고 있으면서도 사설, 즉 논지나 주장에 있어서는 자체의 취약성을 스스로 폭로하는 용기부족과 기개 없는 필치”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가 되었다(문규, 1965, 28쪽). 결국 1960년대 말에 권력에 대한 굴종의 대가로 신문이 급격한 기업적 성장을 했던 반면에 논조는 급격히 위축되었고<sup>13</sup> 결국 신문이 ‘가스중독’에 걸려 있다고까지 비판될 정도가 되었다(천관우, 1969). 1969년의 3선 개헌 이후 신문들이 비판적 논평은 물론 정권에 불리한 사건에 대한 사실 보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sup>14</sup>

한편 기자들은 언론윤리위원회 파동 당시 기자협회를 조직하여 동법 제정반대 운동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언론윤리위원회법

---

12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당시 신문의 비판적 논조에 대해 이상우는 “한국 언론사상 마지막 불꽃이었다”고 평가하고 이후 신문의 ‘정론성’이 급격히 사라지고 ‘상업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이상우, 1975, 23쪽).

13 이상우는 정부의 특혜에 의한 ‘신문경영 호전의 파급효과’는 결국 “정부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며 오늘 날 언론이 비판을 받고 있는 무기력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1969b, 29쪽).

14 “취재해도 지면에 보이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느냐”라는 학생들의 제지로 학생 시위를 취재하러 갔던 기자들이 교문도 통과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학생들의 언론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기자협회보』, 1969. 6. 27).



파동과 『신동아』 사건을 계기로 권력에 굴종한 경영진의 편집진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면서 결국, “신문이 편집인 손을 떠났다”고 지적되고(최석채, 1968) “우리 언론계의 지배자는 기자도 편집인도 아니고 결국은 기업주라고” 지적되기에 이르렀다(박권상, 1969).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1969년의 3선 개헌 이후 신문들의 논조가 더욱 변질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졌던 것이다(장윤환, 2013, 30~31쪽). 이렇듯 경영주가 편집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자 ‘신문의 사기화(私器化) 경향(신상초, 1969, 8쪽)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런 경향은 1970년대 들어서서 더욱 강화되어 1975년 경영주에 의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들의 대량해고로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독자들은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당시에는 동법 제정 반대운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다. 뒤이어 1964년 9월 2일에 정계는 물론 종교계, 법조계, 학계 등 각계 대표들이 자유언론수호국민대회 발기준비위를 개최하여 언론탄압 규탄 강연회, 윤리위법 찬성신문 안 보기운동, 언론수호서명운동, 언론윤리위원회 소집에 반대 또는 기권한 5개 신문에 대한 의연금 모집 전개를 결의하기도 했다(김언호, 1977, 147~148쪽). 이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기독교연합회, 서울시내 10개 대학신문기자 등도 동법 철폐와 동법 반대신문에 대한 보복 철회를 촉구했다. 이렇듯 언론사와 함께 독자들이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활동했지만, 이것은 일부 지식층 독자들의 단체별 참여로 국한되었고, 활동의 방식도 성명서를 발표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차원이었다는 한계를 보였다(김기태, 1991, 235쪽).

그러나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과 뒤 이은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으로 신문들의 논조가 변질되면서 독자들의 비판적 인식도 높아졌다. 1966년의 8월에 실시한 독자조사에 따르면 독자들 중 신문이 “사실을 정확히 보도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5.6%에 불과했고, “대체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28.7%에 불과했다(고영복, 1967, 162쪽). 이렇듯 극히 일부 독자들만 신문의 사실보도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했던 것은 점차로 신문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였다. 결국 1967년과 1968년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굴복한 이후, 특히 1969년에 들어서서 신문들이 비판적 논평은 물론 정권에 불리한 사건에 대한 사실보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자, 일부 대학생들은 신문에 대해 노골적인 규탄을 하고 나섰다. 3선 개헌 반대시위과정에서 학생들은 언론사상 처음으로 ‘언론인에게 보내는 공개장’ 발표하여 한국 언론인이 “무능력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있으며 권력과 금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던 것이다(이상우, 1975, 29쪽).

비록 일부 대학생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었지만,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독자들의 신문에 대한 비판적 활동은, 과거 독자들이 신문에 대한 정권의 탄압에 함께 맞서 활동했던 것과는 양상을 달리 하는 것이였다. 이것은 결국 국가권력에 대한 신문의 굴복으로 이제는 독자들이 정권과 신문에 대해 모두 비판적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였다. 이와 같은 독자들의 비판은 지사적 언론인의 전통을 앞세우던 기자들에게는 충격으로 와 닿았고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었다. 정권의 탄압과 경영진의 통제에 저항하기도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독자들의 비판도 외면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였다.

1971년에는 3월에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언론 화형식을 벌이거나 언론에 경고장을 보내는 일들이 벌어졌다. 대학생들은 ‘언론인에게 보내는 경고장’에서 “안타깝다. 그 자리 그 건물이건만 민주투사는 간 곳 없고 잡귀들만 들끓는가. 사자의 위용은 어디 가고 도적 앞에 꼬리 흔드는 강아지 꼴이 되었는데”라는 비판까지 했는데, 이런 주장이 “당시 언론계의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지적”했고 그것이 “언론인들에게 준 충격이 매우 컸다”고 한다(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2005, 70~71쪽). 당시 『동아일보』 기자였던 김언호는 “학생들이 언론에 대한 이와 같은 불신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었으며 기자들은 당혹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김언호, 1975, 84쪽). 특히 나름대로는 여전히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던 젊은 기자들에게 준 충격은 매우 컸을 것이다. 독자들의 언론에 대한 거센 비판은 언론인들의 직업적 정체성 변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 4. 박정희 정권 시기 언론인의 직업적 정체성

### 1) 언론 환경의 변화와 지사주의의 쇠퇴

1950년대까지는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지사주의적 언론인의 전통을 강조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1954년 3월 25일에 한국신문기자협회와 서울신문학원이 공보처의 후원을 받아 1개월 예정으로 ‘신문기자 아카데미’를 열기로 한 것을 계기로 쓴 『경향신문』 사설 ‘언론도(言論道)의 확립을 위하여’(1954. 3. 26)에서 이관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sup>15</sup>

우리의 근대적인 언론기관의 창시와 그 발전의 자취를 보면, 한말 외세의 침점(浸漸)에 대항하는 민족항쟁의 중대한 일익으로서 더욱이 일정(日政)기에 있어서는 거의 우리 민족의 사회적, 정치적 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감이 없지 않았다. 그 경영상 기초라던가 제작기술이라던가 모두 빈약하고 서투른 편이 많았지만, 그러나 언론의 목표가 뚜렷이 확립되었으며 또 언론인의 신념과 행동이 함께 일정한 규범 밑에서 견고하고 활발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족적 해방을 위한 계몽과 선전은 물론 때로는 항쟁의 선두에서 정간, 폐간 내지 투옥의 모험을 감행하면서 투쟁을 실천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언론기관으로 말하면 도의적인 관점에서는 최고급의 수준을 걸어 나갔었다.

이관구의 주장대로 언론인들은 오랫동안 “계몽과 선전은 물론 항쟁의 선두”에서 투쟁하기도 했던 것이다. 1960년에도 4·19혁명이 학생과 신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정도의 평가를 들을 만큼 언론인의 지사적 역할을 인정받기도 했지만, 4·19부터 5·16까지의 1년 동안에

---

<sup>15</sup> 이 글은 무기명 사설이지만, 이관구가 자신이 쓴 사설을 따로 모아 놓았고, 이것이 나중에 책으로 묶여 나와 필자를 확인할 수 있다(이신복, 1986, 292~293쪽).

는 방종과 혼란 속에 사이비 언론인 문제로 지탄을 받기도 했다(박용규, 2010). ‘언론 정화’를 명분으로 5·16 쿠데타 직후부터 언론 통제가 강화되고, 언론인에 대한 연행과 구속이 빈발해지면서 언론인들의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다(곽복산, 1968, 348~350쪽). 5·16 이전과는 달리 정권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크게 위축된 것은 물론 호의적 보도가 지면에 자주 나타나자 최석채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최석채, 1962, 37쪽).

신문인들 모두 지사와 같은 준절(峻節)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이것은 도학자의 이상론과 같은 것이어서 실소의 대상밖에 안 될지 모른다. 그러나 기탄없이 말해서 혁명 이후 위축될 대로 위축된 한국 언론인은 대부분이 무사(無事)주의로 현실 도피에 바쁘거나 앉았을까 자성해 볼 만한 일이다.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언론인의 기개가 부족하다’고 질타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만 보아도 얼마나 ‘그날 살이’에 급급했는가를 알 수 있지 않는가.

5·16 군사쿠데타 이후 언론통제가 강화되던 상황에서 지사주의는 ‘도학자의 이상론’ 같은 것으로 치부되기에 이르렀고, 언론인에게 ‘지사와 같은 준절’은 사라지고 ‘무사주의’와 ‘현실 도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경향은 1964년의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을 계기로 급격히 강화되었다.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당시만 해도 기자들은 정권의 탄압과 이런 탄압에 굴복한 경영진에 맞서서 저항했다.<sup>16</sup> 특히 이런 파동 과정에서 기자협회가 결성되었는데 파동 직후의 좌담회에서 한 기자는 “기자협회는 투쟁 과정의 하나라는 ‘모티브’를 얻어서 구성된 셈입니다. 실지로 투쟁을 해보니까 역시 연로한 분들보다는 젊은 우리의 단체가 활동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라고 하며 기자협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기자는 “정부 측에서 발행인 협회에만 압력

---

16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당시 “경영주들이 정부나 관권의 압력에 얼마나 무력한가를 입증했고 또한 한국 언론사에 두고두고 씻지 못할 오명을 남겼다”는 비판까지 나왔다(반영환, 1965, 129쪽).

을 가하면 그 발행인 밑에 종사하고 있는 편집인이라든가 일선기자들은 그대로 다 복종할 것이고, 따라서 모든 것이 정부가 뜻하는 대로 잘 되어 나갈 줄 알았는데 의외에도 일부 발행인들의 태도와는 달리 전 언론계가 강경한 태도를 계속 견지”했고, 그 중심에 기자협회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송두빈 외, 1964, 115~124쪽).

그러나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이후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이 강화되면서 언론인들의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송건호, 1990, 151~160쪽). 비록 기자협회를 중심으로 언론탄압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이전에 비하면 그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대응 과정에서 경영진과 편집진의 관계도 과거의 동지적 유대 의식이 사라지고 대립적 관계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홍종인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홍종인, 1970, 6~7쪽).

나라의 중대한 사태 중의 하나는 신문이 부닥치고 있는 자신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오늘날 이 사회에 언론자유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신문과 신문가자들은 왜 풀이 죽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1967년의 선거의 타락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신문도 확실히 타락의 길을 밟기 시작했다. 사실보도가 잘못 사장되기도 했다. 심지어는 국회에 나타난 사실까지도 넘겨버리는 경우가 없었고는 말하기 힘들다. 이런 것은 신문이 타고난 언론자유를 사명을 포기하는 자살행위가 될 것뿐 아니고 국민의 귀와 눈을 덮어버리는 악덕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었다. 정치의 부패는 선거의 타락에 나타나고 있거니와 신문의 타락은 정치의 부패에 동조함으로써 그 자신의 병들고 썩은 증상을 보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렇듯 원로 언론인으로부터 비판이 나오던 상황에서, 언론인들이 “자기비판-오히려 자학론이라고 할 만큼 극단적인 자책”까지 하고 있다고 하며, 그 근거는 “언론인들이 정치권력에 대해서 너무도 무력해졌다”는 점과 “금전만능의 풍조가 보편화되어 정치 권력층의 금전공여를 수반한 언론인 조작에 대하여 언론인 자신들이 극도로 무력해졌다”는

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임방현, 1969, 134쪽).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비판적 언론활동을 하기 위한 ‘자성’이기보다는 ‘자학’이거나 또는 ‘합리화’에 그치고 마는 것들이었다. 선우휘는 홍종인의 비판에 대해 “오늘 날 신문인들은 자성의 단계를 벗어나 극도의 무력감에 사로잡혀 자조, 자회(自侮), 자학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무 격한 말씀을 하시면 영 자신을 잃고 정신적으로 죽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홍종인 선생님, 선생님께서 화살을 밖으로 돌려 권력에 대해 과감히 그리고 강력히 발언해 주십시오. 후진과는 달리 선생님은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될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이상우, 1969a, 257~258쪽).

또한 정권의 특혜에 힘입어 신문이 기업화되면서 경영진에 의한 내적 통제도 강화되었다. 신문 ‘편집권의 자주성 소멸’은 일차적으로는 ‘권력의 작용’ 때문이었지만, 갈수록 ‘신문의 사주나 경영자가 권력에 스스로 영합해서 비위를 맞출 자세’를 갖고 있다는 점이 더 큰 영향을 주었다(김진배, 1970, 12~13쪽). 권력에 영합한 경영진이 행사할 수 있는 내적 통제 of 가장 큰 수단인 인사정책이었다. 실제로 1960년대 후반에는 불합리한 인사로 언론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편집실, 1969, 53~56쪽). 1960년대 말에 가면 언론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정권의 탄압보다 경영진의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비록 여기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는 하지만, 기자들은 “신문이 제대로 보도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첫째 경영주의 압력, 둘째 관권의 간섭, 셋째 일부 기자의 부채”를 들었다(정영애, 1969, 3쪽). 또한 “양심적인 수많은 기자들이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불의인 줄을 알면서도 쓰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영자의 눈에서 벗어날까 보아 그러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이상우, 1969b, 144쪽).

이렇듯 한국 언론인에게 1960년대까지 “기자라는 직종이 다른 직업에 비해 특별하다는 의식”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저항하는 언론인’이라 말로 ‘이상적인 언론인상’이라고 바라보았지만, 이런 의식이 점차 사라

지게 되었던 것이다(남시욱, 1997, 174~175쪽). 1970년대 이후에는 사실보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지사’라고 부르지 못하게 되었다. 천관우는 임중빈과의 대담에서 기자가 지사에서 샐러리맨으로 전락했다는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신문기자가 지사나 샐러리맨이냐 하는 이야기는 신문계 내부에서는 꽤 끈질기게 이어 나온 화제의 하나였습니다. 그래 나는 이런 말을 어디엔가 쓴 일이 있어요. 지사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니 말을 바꾸어서 ‘진실하게 현실에 참여하는 지식인’이라고 해 보자. 그런데 기자라면 처음부터 현실참여를 직업으로 삼은 지식인이다. 그것이 싫다면 반(反)기자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으나, 지사형이나 샐러리맨형이나, 이렇게 자문하기보다는 차라리 기자형이나 반기자형이나, 이렇게 자문해 보자(임중빈 천관우, 1971년, 30쪽).

천관우의 주장은 ‘지사’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기자들이 ‘진실하게 현실에 참여하는 지식인’이 될 필요는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이런 언급은 이미 많은 기자들이 ‘반기자형’으로 진실하게 현실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었다. 이런 현실에서 기자들이 스스로를 ‘지사’로 부르는 일이 거의 사라졌고, 자연스럽게 지사적 전통도 급격히 약화되었던 것이다. 지사적 전통의 소멸 속에 기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며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되었다.

## 2) ‘샐러리맨화’에 대한 자조와 노조 결성 주장

1960년대 들어서서 언론인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신분에 대해 큰 불만을 드러냈다. 이런 언론인들의 직업에 대한 인식은 1963년 말에 조사된 결과를 정리한 <표 1>과 <표 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을 통해 미래 전망이 불투명하고(18.1%), 수입이 적어서 불만족스럽다는(16.1%) 인식을 가진 언론인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1. 기자 생활 만족 여부

항목	비율
훌륭한 직업이다	14.1 %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	19.1 %
미래에 별로 기대를 가질 수 없다	18.1 %
기자가 된 것을 후회한다	4.0 %
아직 모르겠다	7.2 %
그저 그렇다	20.1 %
수입이 적어서 불만스럽다	16.1 %
무응답	1.3 %
총수	100 %

출처: 김규환 외(1964, 70쪽).

〈표 2〉를 통해 이런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언론인의 생활을 보장하고(30.7%), 경영방식을 합리화해야 한다는(26.7%)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언론인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기자직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영의 근대화화 합리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다.

〈표 1〉과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이미 1960년대 초부터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신분에 대한 불만이 컸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964년에 기자협회 결성이 논의될 때 이미 노조 행태로 출범할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다.<sup>17</sup> 그러나 1964년 당시에는 여전히 “기자는 노동자라기보다는 지사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상태”였고(한국기자협회, 1994, 382쪽), 경영진의 반대도 염려되어

<sup>17</sup> 관훈클럽도 결성 초기에 언론노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한 바 있었다(관훈클럽 50년사 편찬위원회, 2007, 83~85쪽). 4·19 이후인 1960년 6월 17일에 『연합신문』 사원 300여 명이 노조를 결성한 바 있었다(『경향신문』1960. 6. 18.). 이런 경험이 기자협회 결성 당시의 노조에 관한 논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표 2. 한국 신문 발전의 선행조건

항목	비율
경영방식의 합리화 및 근대화	26.7 %
신문제작의 현대화	7.2 %
신문인의 양식 및 교육	17.6 %
신문인들의 생활 보장	30.7 %
정부의 언론정책	6.2 %
기자의 경제적 지적 수준 향상	5.9 %
무응답	5.7 %
총수	100 %

출처 : 김규환 외(1964, 46쪽).

(한국기자협회, 1975, 53쪽) 결국 노조로 출발하지는 못했다.

이런 현실에서 조세형은 “신문기자를 해가면서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은 장래에 대한 문제”라고 하며, ‘신분과 지위에 관한 사회적 불안’과 ‘기자들의 경제적 권익이 보장되지 않는 경제적 불안’으로 제대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조세형, 1964, 28~30쪽). 또한 조세형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언론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조세형, 1966a, 132쪽).

그런데 신문 기업들은 또 그렇다 치고 이른바 신문인이란 것은 무엇이나? 지금은 뜬금없지만 ‘기자는 사회의 목탁’이란 소리를 귀찮이 아프도록 들어왔고 아직도 이들은 은근히 이런 의식 속에 살고 있다. ‘사회적 목탁’이니까 자기가 단순한 월급쟁이거나 임금노동자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는다. 그러다가도 월급이 하루만 늦게 나와도 얼굴색이 노란해질 정도로 전전긍긍하며 중역실에서 전화 한번만 와도 안절부절하게 마련이다. 신분보장은 일반 공장노동자보다 더 애매하고 그들이 쓰는 기사는 경영주의 말 한마디로 180도 뒤바뀔 수도 있는 것이 거짓 없는 오늘의 한국 신문 풍속도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최후의 정조성(貞操城)을 지키는 몸부림인양 자기네들이 단순한 피고용인이 아니라 사회의 목탁이라는 자아의식에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정권의 탄압으로 언론활동이 위축되고, 여전히 처우는 별로 좋지 못하던 현실에서 기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직업이 단순한 ‘샐러리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자주 토로했다(이정훈·김균, 2006, 66~67쪽). 남재희는 “기자란 직업은 점차 ‘건전한 직업’으로 모습을 바꾸고 있다. 그러기에 ‘지사로서의 기자’, ‘한량으로서의 기자’, ‘탐정으로서의 기자’와 같은 것은 이미 낡은 관념으로 되었으며 지금은 누구의 말마따나 ‘마치 은행원 같은’ 건조한 ‘샐러리맨으로서의 기자’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남재희, 1966, 221쪽). 이런 주장은 1960년대 중반 이후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이 강화되어 비판적 언론활동이 어려워진 한편 신문사 내에서는 여전히 해고와 저임금에<sup>18</sup> 시달리던 기자들의 직업에 대한 불안과 냉소를 담고 있었다.

비판적 언론활동도 하지 못하고 직업적 안정성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1960년대 말부터는 언론인의 자조적 또는 자학적 의식이 나타났고, 그런 의식을 함축하고 있던 표현으로 ‘언론인의 샐러리맨화’가 자주 주장되었다. 이상우는 “정부 시책에 의한 물량적인 분위기와 권력의 측면 작용에 더하여 신문 내부적인 여건으로 말미암아 저항적인 기질보다는 샐러리맨으로서의 자세가 기자사회를 풍미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펜보다는 생활, 비판보다는 처세가 앞선다”고 언론계 풍토의 변화를 비판했다(이상우, 1969a, 29쪽). 이승우는 언론인이 과거의 ‘영웅적 이미지’와는 달리 “한날 시정의 소심한 샐러리맨과 별 다른 없는 왜소한 인간으로 타락”했다고 하고는, 이런 샐러리맨화가 지니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이승우, 1970, 37~39쪽).

---

**18** 1969년 말의 언론인 급여 실태 조사에서는 대상자의 4분의 1 이상인 26.2%(1,056명)가 면세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 언론인 중에서는 12.2%, 주재기자 중에서는 51%가 면세점 이하의 임금을 받았다(정진석·김영성, 1970, 141쪽).

우선 기자의 쉐러리맨화 성향이 진정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개념부터 똑바로 파악하고 넘어가야 한다. 한 마디로 잘라 말해서 기자의 쉐러리맨화 성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또 다른 일면에서 기자의 ‘타락’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타락’이라는 말은 상당히 다양한 개념을 지녔다. 그것은 ‘세속에의 지나친 밀착’일 수도 있고 ‘정치권력예의 순화(馴化)’일 수도 있고 ‘시류에의 맹종’일 수도 있고, ‘책임으로부터의 도피’일 수도 있다. 이렇듯 다양한 개념을 복합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타락’의 인과는 곧 기자의 ‘왜소화’이다.

1960년대 말에는 쉐러리맨화로 표현되던 자조와 자학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시도로서 노조 결성이 본격적으로 주장되기 시작했다. 이상우는 “결국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자의 양심은 위축되고 포기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할 길을 한 가지밖에 없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인 단결권을 행사하는 길뿐이다. 무관의 제왕입네 하는 실속 없는 자부가 통용되던 시기는 벌써 지나가 버린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이상우, 1969b, 144쪽). 손주환은 “경영진들이 노사분쟁을 염려하여 ‘기협’이 노조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언론계의 장래에 대한 긴 안목이 결여되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노조형태로 발전한 기협은 노사분규보다 언론자유를 지키는 데 더욱 정력을 쏟게 될 것이며 경영진들은 언론의 사실 전달 기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구실을 기협에 돌릴 수 있는 입장을 누리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손주환, 1970, 27쪽).

이와 같은 주장들을 통해 1960년대 말에 기자들이 자신들을 신문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김동민, 1990, 80~83쪽), 이보다는 정권과 사주의 언론통제 앞에 무기력해진 기자들의 자조적 의식이 “직업적 권익이나 보장받자”는 식으로 변화되어 나갔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내부적으로는 신분보장을 받고, 외부적으로는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노조결성이 주장되었지만, 이 시기에 실제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1970년대 초에도 “지사풍을 지녔던 초창기 언론인의 모습이 보잘

것 없는 샐러리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거나(김진배, 1971, 138~139쪽) “후배 학생들이 기자가 된 선배에게 달려와 ‘형도 별수 없구려’하고 힐난했다. 그 선배기자는 ‘야 별수 없다. 나는 월급쟁이야’라고 대꾸해 줬다. 오늘의 기자는 ‘샐러리맨’화 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등(최규장, 1972, 46쪽) 자조적 의식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언론인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조의식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김종림·오진환, 1972, 152쪽). 이것은 언론계 경력이 길수록 지사주의적 전통에 대한 막연한 집착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자조의식에 머무를 뿐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한편 자조적 의식을 넘어서서 젊은 기자들은 점차로 정권의 언론탄압과 이에 순응하던 경영진이나 간부 언론인들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sup>19</sup> 즉, 정권의 강력한 탄압이 가해지고 이에 순응하며 경영진이 기업적 이윤추구에만 집착하던 현실적 조건이, 오히려 기존의 막연한 지사주의적 직업의식에서 벗어나 기자들이 노동자적 자각을 토대로 언론민주화의 문제를 보다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이런 현실에 대한 자성을 통해 1974년에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노조결성’과 ‘자유언론실천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2005, 68~142쪽; 한국일보 74노조 출판위원회, 2005, 51~92쪽). 『동아일보』 노조는 결성 초기에는 주로 원만한 노사관계와 임금,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주장하였으나 점차로 사회정의

---

<sup>19</sup> 정만교는 해방 직후와 1950년대에도 후배기자들의 선배에 대한 불신이 있었지만, 이는 권력의 언론탄압과 경영진의 전횡이라는 요인이 작용했던 1960년대 후반의 상황과는 달랐다고 지적했다(정만교, 1970, 8~12쪽). 1950년대에는 일본식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간부들과 미국식 교육을 받은 젊은 기자들 사이의 갈등이 있었다면, 1960년대 후반에는 권력과 경영주의 통제에 순응하는 간부들과 이에 대해 비판적 문제의식을 지닌 젊은 기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의 구현 등도 주장하는 등 ‘의식의 전환’이 나타났는데, 이는 결국 ‘언론 노조운동’이 ‘자유언론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것이다(김진홍, 1983, 96쪽). 바로 이런 가능성 때문에 노조 결성 움직임에 대해 정권의 강력한 탄압이 가해지고 권력에 야합한 경영진의 해고가 이루어졌던 것이다(김세은, 2012, 292~319쪽).

### 3) 자질 향상의 필요성 주장과 ‘전문직화 표방’

‘젊은 신문인 간의 친목과 신문연구’를 내세우며 1957년에 출범한 관훈클럽의 등장은 언론인의 ‘자질 향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해 “항의와 투쟁이 아니라 이론으로 무장하고 합리적인 연구와 언론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응”하고자 했다(관훈클럽 50년사 편찬위원회, 2007, 59~87쪽). 미 국무성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연수를 받은 언론인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관훈클럽은 ‘전문직주의의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차재영, 2014).

김규환도 5·16 군사쿠데타 얼마 뒤에 쓴 글에서 ‘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전통과 습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언론인의 사회적 윤리감과 지적 수준의 양양’ 등을 위한 체질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규환, 1961, 81~83쪽). 김규환은 “우리나라의 저널리스트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성격을 자각케 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를 고찰해 본다면 대체로 자유당 정권 말기에 신문이 상업적 성격을 띠기 시작하고 또 공개적 경쟁을 통해 젊고 유능한 대학 졸업자들이 신문에 입사하게 된 때부터였다고 생각된다. 즉 그 이전까지는 사회적 엘리트 의식이 프로페션 의식으로 분화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김규환, 1969, 6쪽). 즉 1950년대 말부터 언론인들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성격을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959년에 『한국일보』 기자가 되었던 송효빈은 언론인의 지사적 전통이 1950년대까지 계속되었지만, 근대화가 추진된 1960년대에 변화되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표 3.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양자의 선행 여부

항목	비율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경제 발전을 선행	21,5 %
정치제도보다 국가경제발전 선행	24,5 %
다소 시간이 걸려도 두 가지가 병행해서 발전 가능	36,6 %
민주주의제도 신장 선행	13,8 %
무응답	13,8 %
총수	100 %

출처: 김규환 외(1964, 65쪽).

주장했다(송효빈, 1993, 20쪽).

자유당 치하의 언론도 기본적으로는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저항정신으로 일관해 왔다고 하겠다. 신문의 주요 관심은 자유당정권의 비정(秕政)의 폭로와 고발에 힘썼고 독재정권 타도를 위한 정치선동에 기울었던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 정부를 거쳐 5·16으로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대화가 추진되어 급속한 사회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 변화는 알맞은 전문기자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근대화에 따른 도시 산업사회의 형성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급속한 변화와 함께 복잡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이를 정확히 보도, 해설하고 논평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송효빈의 주장은 1960년대 이후 근대화가 추진되면서 ‘저항정신’보다 ‘전문지식’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고재욱도 “우리나라 신문은 발생사적으로 반발 저항지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나는 이 성스러운 전통을 길이 이어받고 길이 발전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현 시점에서 신문의 사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회적 비판에 귀를 기울일 때가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 신문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민족 독립의 안정과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적극 기여할 역사적 사명

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고재욱, 1965, 31~32쪽).

그러나 언론인의 자질 향상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언론 통제에 대한 순응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더욱 자주 강조되었다. 박정희 정권이 ‘한국 언론이 지니는 투쟁의 전통성을 거세’하며 ‘근대화를 앞세운 언론 정책’을 펼치던 가운데(이상우, 1969c, 29쪽) 이에 대한 호응의 차원에서 ‘근대화를 위한 신문의 사명’이 강조되며 기자들의 자질 향상이 강조되곤 했다. 조세형은 “한국 신문들은 지나치게 투쟁적이거나 항거적이며, 지나치게 부정적인 태도를 지녀왔다. 이제 투쟁과 항거는 협조와 건설로, 부정적 태도는 긍정적 태도로 차원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세형, 1966b, 46쪽). 김규환은 “언론인들은 단지 부정부패를 드러내고 악과 과감히 싸우는 데만 만족해서는 안 되며 문제 해결의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며, 언론인들은 모두 “한국에 있어서 근대화의 필요성과 그 실현 방법에 관한 진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우선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긴급하다는 것을 그들의 사회적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규환, 1966, 9~10쪽). 이렇듯 근대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은, 1963년 말에 실시된 언론인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표 3〉의 결과만 놓고 보면 1963년경에 적지 않은 언론인들이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지지하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결과는 언론활동의 위축을 합리화하려는 의도와 근대화를 위해 정부에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결합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1966년 조사에서도 응답한 언론인 중 60%가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 희생되어야 한다”는 진술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을 보면(홍승직, 1972, 176쪽), 경제 발전을 위한 언론의 기능적 역할에 대한 언론인의 공감이라는 정도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방현은 “엄격히 따져보아 오늘의 신문기자가 빠져 있는 자기부

정의 함정은 그들이 옛날의 대기자형보다 저열한 자격과 지위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대기자의 배경이던 전근대적 사회를 발전적으로 부정하는 근대적 산업사회의 상황조건에 그들이 미처 적응을 못했거나 급격한 주변의 변화속도에 비해 자기의 사고와 행동의 적응도가 뒤져 있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하며, 기자들의 자조와 자학을 근대사회의 발전에 대한 부적응의 결과라고까지 주장했다(임방현, 1968, 27쪽). 또한 임방현은 “전통적 한국 언론인의 기성 정형으로서의 지사, 우국투사형 및 대 권력(對權力) 저항자형”을 이상적인 언론인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자학까지 하기에 이르렀다고 하고, 여기에서 탈피한 새로운 언론인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임방현, 1969, 138쪽).

한마디로 오늘의 언론과 언론인의 기본적 기능과 책임은 획일적인 대 권력 관계 도식만에 의존하여 어떠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사상(事象)에 피부적으로 반응하고 피상적으로 ‘예스’나 ‘노’냐를 판가름 하는 데에만 있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옛날의 수세적 방위자(防衛者)의 소극적 입장에서 진일보 하여 언론과 언론인 각자가 전환기 사회의 운동법칙을 통찰할 수 있는 발전의 이론을 스스로 탐구하여 지녀 갖는 데에서 그 적극적 입각점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곧 한국 언론의 오랜 전통이요, 어두운 역사적 유산으로서의 저항자, 자학자의 고소(古巢)를 박차고 사회발전에서의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독립적 성격을 쌓아 올리는 길이다. … 오늘의 언론과 언론인이 더욱 힘써야 할 것은 사회 제 기능의 분화, 전문화 추세에 발맞추고 오히려 이를 이끌어 나갈만한 전문적 지식과 교양과 자질의 향상, 어느 사건을 단편적으로 피상적으로 전언(傳言)하는 데 그치지 않는 깊이 있고 종합적인 안목, 어느 사건이나 문제의 표피만이 아니라 그 전체적 맥락까지를 독자 앞에 그려낼 수 있다는 배경 심층보도 능력, 그리고 비판의 책임, 책임 있는 비판을 자각한 여론지도, 형성자로서의 구실 제고 등이라고 생각된다.

송진호는 1964년에 쓴 “민족지성의 반성과 비판”이라는 글에서



1960년대에 들어서서 한국 사회에는 이념형 지성인 ‘방향지’가 퇴조하고, 기능형 지성인 ‘사실지’가 득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즉,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도 지식인이 각종 직종으로 분화되어 일종의 기술자화 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이런 ‘지성의 기능화’는 주어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테크닉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고, 주어진 일이 옳으나 그르냐 하는 가치판단에는 소홀하게 만든다고 하며(송건호, 2002a, 185~209쪽), 이런 경향이 언론인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sup>20</sup> 그는 1967년에 쓴 ‘신문과 지도기능’이라는 글에서 “지금 한국 언론인들은 신문의 자유와 책임을 주장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언론인으로서 책임과 윤리에 투철하면 훌륭한 신문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언론의 전통이 저항 속에 빛나고 있으니 이제 책임감을 느끼게 될 단계도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송건호, 2002b, 320쪽). 그러나 그는 여전히 정권에 의해 언론이 탄압받는 현실에서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언론인의 전문성이나 개인적 차원의 책임을 더 강조하기 시작한 당시 일부 언론인들의 인식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sup>21</sup>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보아서 기자에 대

**20** 송건호가 일찌감치 주장했던 지식인의 분화에 대한 논의가 196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활발해졌다. 그중 김영모는 지식인을 ‘사회기사(social engineer)’로서의 지식인과 ‘이념 지향적’ 지식인으로 나누었고, 다른 필자들도 지식인의 유형을 나누며 ‘비판적 참여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했다(강수택, 2001, 116~125쪽).

**21** 송건호가 직접 관훈클럽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와 같은 비판은 당시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며 활발하게 활동했던 관훈클럽을 어느 정도 의식한 것이었다. 그는 1961년에 관훈클럽에 가입하기는 했지만, 1960년대 이후 내내 관훈클럽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활동했다. ‘진보적 민족주의자’였던 그로서는 ‘친미적인 언론인 집단’이라는 평가를 듣던(이영희·임헌영, 2005, 210쪽) 관훈클럽의 활동에 대해 동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미국연수를 다녀 온 기자들의 모임”이라는 외부의 시선을 염려해서인지, 관훈클럽 스스로도 그 무렵 “절대로 버터 냄새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묵시적인 경계심’을 갖고 활동했다고 한다(정범준, 2007, 49쪽). 그리고 실제로 조세형이나 박권상 같은 관훈클럽의 주요 인물 중에는 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표명했던 경우도 있었다.

한 외적 여건이 갑자기 좋아질 것을 바라기는 어렵고 보면 기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은 오직 쟁취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누구와 싸우기보다 각자가 자기의 자질을 향상함으로써 전문기자로서의 소양을 기르고 사회 진출을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사회적 적응성을 몸에 익혀 나가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더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었다(김영빈, 1970, 106쪽).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된 연구기관의 설립이나 이를 통한 언론인 재교육은 이런 인식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강명구, 1993, 83~89쪽).

1964년에 일부 발행인들이 출연하여 발족된 한국신문연구소는 연구, 조사 및 기자 재교육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좌담, 강연뿐만 아니라 1966년부터는 서울지역 수습기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또한 1963년에 서울대 신문연구소가 설립되면서 1년제 연구과정을 설치하여 기자들에 대한 재교육이 실시되었다. 한편 편집인협회와 기자협회도 언론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계속 실시했다. 연구소나 언론인 단체가 중심이 되어 진행된 기자 재교육 과정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기는 했지만, '비체계적'이고 '비지속적'이었다는 점에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하여 왔다"고 할 수 있고, 결국 유신체제가 성립된 1972년을 고비로 점차 사라져 버렸다(차배근, 1980, 23~27쪽). 언론인 스스로 전문직주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재교육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 한 요인이었다.

한편 5·16 직후 군사정권에 의해 사이비 언론인에 대한 대대적인 정화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런 타율적인 시도와는 달리 1960년대 들어서서 사이비 언론이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자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언론정화 작업이 시도되었다(한국기자협회, 1975, 113~117쪽). 그러나 이런 자율적인 언론정화 작업은 언론인의 직업윤리 확립을 위한 구체적 노력보다 주로 "비리를 강요하는 구조적 저임금"의 해결을 위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 나지 못했다(박인규, 1993, 40~44쪽). 또한 1961년에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이 제정되고 동년 9월 자율 규제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가 발족하여

기자의 직업윤리의 확립과 자율규제 시도가 이루어졌다. 신문윤리위원회도 타율 규제를 막기 위한 선언적 의미만을 지녔던 것으로 기자들의 직업윤리의 확립에 별달리 기여하지 못했고(강명구, 1993, 82쪽) 언론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언론자유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었다(김동철, 1991, 139~140쪽). 1970년대 이후에는 사실상 언론인의 직업윤리 정립을 위한 별 다른 움직임을 보여 주지 못했다.

#### 4. 맺는 말

5·16 쿠데타 직후부터 박정희 정권은 ‘채찍과 당근’의 논리로 언론을 길들여 나가려는 정책을 실시했다. 언론사 정비를 통해 언론구조를 재편하고, 강력한 탄압으로 언론과 언론인을 순치시켜 나가는 한편 다양한 특혜를 베풀어 언론을 자신들의 정책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이런 언론정책은 비판적 언론활동의 위축을 가져왔지만, 특혜를 기반으로 신문사가 하나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런 신문의 기업화는 경영진의 통제력을 강화시켜, 이제는 내적 통제를 통해서도 언론의 비판을 약화시킬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가운데 언론인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고용 불안 등 직업적 불안정성에 시달렸다. 또한 이런 외적, 내적 통제의 강화로 비판적 논조가 소멸되면서 독자들의 언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형성되었다.

언론에 대한 외적, 내적 통제는 언론인들의 저항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독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도 언론인들은 이런 통제에 맞서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는 못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언론자유의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언론인들의 비판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송용준, 2001, 62쪽). 언론인의 지사주의적 전통은 1960년대 중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여, 1969년의 3선 개헌을 앞두고 붕괴되기 시작했고, 1975년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기자 강제 해

직을 거치며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더 이상 권력을 비판하고 국민을 계몽하는 언론인이 아니고, 권력의 통제에 굴종하고 독자의 비판을 눈치 보는 언론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자조와 자학에 빠져 있던 언론인들의 움직임은 크게 ‘노조결성 시도’와 ‘전문직화 모색’이라는 두 가지로 나타났다. 외적·내적 통제 속에 언론 활동이 위축되고 직업적 권익도 보장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직업이 ‘샐러리맨화’되고 있다고 자조하던 언론인들은 현실 타개를 위해 노조 결성을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언론인들은 ‘사회적 지위 하락이나 직업적 이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직화’보다는 ‘노조결성’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다(이정훈·김균, 2006, 68쪽), 그러나 경영진과 정권이 경제적 부담의 증가와 정치적 저항의 가능성 때문에 노조 결성 시도를 강력히 탄압했고, 언론인들 스스로도 노동자로서의 의식을 확고하게 갖고 추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론인들의 노조 결성은 결실을 거두기 어려웠다.

자질 향상과 윤리의식 제고 등을 앞세웠던 전문직화의 모색은 관훈클럽의 영향 속에 논의가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전문직화의 추구는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근대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권의 의도와 일부 언론인의 ‘현실 순응적인 태도’가 결합되면서 ‘기능적 전문성 향상’ 정도의 논의로 변질되고 말았다. 특히 유신체제 성립 이후에는 정부 주도하에 기자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결국 박정희 정권 시기의 전문직화 주장은 단지 비판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현실을 정당화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강조하면서도 언론윤리의 중요성은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렇듯 박정희 정권시기에 ‘노조 결성’과 ‘전문직화 추구’라는 두 가지 시도가 모두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정권의 강력한 탄압과 경영진의 부당한 통제에 맞설 만한 언론인들의 역량과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외적·내적 통제가 급격히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지사적 언론인’ 전통에 대한 극복을 내세웠지만, 정작 한국 언론인의 ‘지사주의’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도 작용했던 결과였다. 즉 지사주의 바람직한 계승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박정희 정권 시기의 이런 경험들은 이후 언론인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신들의 직업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박정희 정권 시기의 경험은 ‘지사적 언론인’이 ‘언론노동자’나 ‘전문직으로서의 언론인’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라는 지사적 언론인 전통의 긍정적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언론노동자로서의 철저한 의식과 전문직주의에 대한 체계적 인식을 종합해 언론인의 바람직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해주었던 것이다. 이렇듯 언론인의 직업적 정체성의 변화 과정을 연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언론인상의 모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명구 (1993). 『한국 언론 전문직의 사회학』. 서울: 나남.
- 강명구 (2013). 훈민과 계몽: 한국 저널리즘은 왜 애국적인가. 『저스티스』, 통권 134-2호, 515~516.
- 강성재 (1986). 박정권과 언론탄압. 『신동아』, 1986년 4월호, 400~419.
- 강수택 (2001). 박정희 정권 시기의 지식인론 연구. 『사회와 역사』, 59호, 111~144.
- 고영복 (1967). 한국 매스컴 현황 분석. 『세대』, 1967년 1월호, 152~191.
- 고재욱 (1965). 무엇을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진해야. 『신문연구』, 6권 3호, 31~32.
- 곽복산 (1968). 5·16혁명과 언론. 『한국의 언론』(337~357쪽). 서울: 문화공보부.
- 관훈클럽 50년사 편찬위원회 (2007). 『관훈클럽 50년사』. 서울: 관훈클럽.
- 김규환 (1961). 한국 저널리즘의 석금. 『사상계』, 1961년 11월호, 76~83.
- 김규환 (1966). 매스컴 활동을 통한 근대화 과정에서 지식인의 역할. 『신문연구 소 학보』, 3집, 3~10.
- 김규환 (1970).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저널리스트. 『저널리즘』, 2호, 4~10.
- 김규환·이강수·한두석·이해명 (1964). 한국 신문인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조사. 『신문연구소 학보』, 1집, 23~76.
- 김기태 (1991). 신문독자운동 사례연구. 『저널리즘』, 21호, 230~251.
- 김남석 (1994). 『한국 신문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동철 (1991). 한국의 언론 윤리·법제. 한국언론연구원 (편), 『한국의 언론』 1(126~186쪽).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김세은 (2012). 해직 언론인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 연구. 『한국언론학보』, 56권 3호, 292~319.
- 김언호 (1975). 르뽀-자유언론운동. 『신동아』, 1975년 3월호, 78~108.
- 김언호 (1977). 언론과 권력의 갈등. 『창작과 비평』, 12권 3호, 123~155.
- 김영빈 (1970). 기자의 사회 진출. 『저널리즘』, 3호, 100~106.

- 김영희·박용규 (2011). 『한국현대 언론인열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종림·오진환 (1972). 한국 언론인의 자조의식. 『정경연구』, 1972년 5월호, 145~153.
- 김진배 (1970). 한국 언론의 60년대와 70년대-경영주와 편집권. 『저널리즘』, 2호, 12~17.
- 김진배 (1971). 언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 『저널리즘』, 6호, 138~139.
- 김진홍 (1983). 『언론통제의 정치학』. 서울: 흥성사.
- 김학준 (1966). 재벌과 언론. 『세대』, 1966년 11월호, 84~113.
- 김해식 (1994). 『한국 언론의 사회학』. 서울: 나남.
- 남시욱 (1997). 『체험적 기자론』. 서울: 나남.
- 남재희 (1966). 기자·‘선비’와 ‘식객’의 기자도. 『세대』, 1966년 10월호, 220~223.
-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2005). 『자유언론: 1975~2005 동아투위 30년 발자취』. 서울: 해답술.
- 문 규 (1965). 한국 신문언론의 생리와 명암 취약성. 『청탐』, 1965년 6·7월호, 25~29.
- 문종대 (1990). 1970년대 신문산업의 자본축적과정. 김왕석 (외), 『한국 언론의 정치경제학』(189~212쪽). 서울: 아침.
- 박권상 (1969). 60년대 언론의 청산. 『편집인협회보』, 1969년 12월 10일자.
- 박권상 (1983). 『자유언론의 명제』. 서울: 전예원.
- 박용규 (2010). 4월 혁명과 언론의 변화. 정근식·이호룡 (편), 『4월 혁명과 한국 민주주의』(519~567쪽). 서울: 선인.
- 박인규 (1989). 한국 언론사주들의 굴절. 『월간 경향』, 1989년 1월호, 194~225.
- 박인규 (1993). 언론자정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오늘의 문제점. 『신문연구』, 55호, 38~62.
- 박홍원 (2011). 편집권 독립과 언론의 자유. 『언론과학연구』, 11권 1호, 123~156.
- 반영환 (1965). 한국의 타부들-언론, 비판권 외의 권부. 『청맥』, 1965년 1월호,

127~129.

- 손주환 (1970). 한국 언론의 60년대와 70년대-권력의 압력. 『저널리즘』, 2호, 18~27.
- 송건호 (1969). 곡필의 사회적 책임. 『신문평론』, 1969년 6월호, 6~9.
- 송건호 (1990). 『한국 현대 언론사』. 서울: 삼민사.
- 송건호 (2002a). 민족지성의 반성과 비판. 『송건호 전집』 6 (185~209쪽). 서울: 한길사.
- 송건호 (2002b). 신문과 지도기능. 『송건호 전집』 10 (307~336쪽). 서울: 한길사.
- 송두빈 · 유승범 · 이환의 · 이용희 · 권오철 (1964). 언론파동의 밑바닥. 『신동아』, 1964년 10월호, 114~124.
- 송용준 (2001). 『1960년대 한국 언론인의 전문직화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효빈 (1993). 『체험적 신문론』. 서울: 나남.
- 신상초 (1969). 상황 속의 언론. 『저널리즘』, 1호, 3~10.
- 신태민 (1970). 70년대 한국 신문 산업의 전망. 『신문연구』, 16호, 27~52.
- 양순직 (1962). 새 언론정책과 한국 신문의 금후 과제. 『최고회의보』, 12호, 106~109.
- 오소백 (1978). 전직 언론인들의 현 주소. 『신동아』, 1978년 4월호, 312~329.
- 오홍근 (1971). 기우. 한국기자협회 편(1989), 『나는 기자가 아니었다』(317쪽). 서울: 도서출판 다다.
- 유선영 (1995). 객관주의 100년의 형식화 과정. 『언론과 사회』, 10호, 86~128.
- 유재천 (1986). 『한국 언론과 언론문화』. 서울: 나남.
- 이목우 (1969). 전환기의 신문-버리고 싶은 풍토. 『저널리즘』, 1호, 47~52.
- 이부영 (1983). 70년대의 한국 사회와 언론. 『언론과 사회』(280~349쪽). 서울: 민중사.
- 이상우 (1969a). 『한국 신문의 내막: 상업주의 신문의 정체』. 서울: 삼성사.
- 이상우 (1969b). 언론은 자기 혁명을 바랄 수 없는가. 『사상계』, 1969년 7월호, 140~144.



- 이상우 (1969c). 전환기속의 언론자유와 책임. 『신문연구』, 15호, 26~31.
- 이상우 (1970). 한국 언론의 60년대와 70년대-70년대로 넘어가는 숙제들. 『저널리즘』, 2호, 34~39.
- 이상우 (1975). 신문 30年. 『신문연구』, 22호, 10~33.
- 이승우 (1970). 한국 언론의 60년대와 70년대-기자의 샐리리맨화. 『저널리즘』, 2호, 34~39.
- 이신복 편 (1986). 『성재 이관구 논설선집』. 서울: 일조각.
- 이영희·임현영(2005). 『대화』. 서울: 한길사.
- 이정훈 (2013). 한국 언론의 상업화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1933년 상업화론과 1960년대 후반 상업화론의 비교. 『언론정보학보』, 통권 62호, 315~328.
- 이정훈·김균 (2006). 한국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샐리리맨화의 역사적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6호, 59~88.
- 임근수 (1969). 『한국 매스미디어산업 경영의 변천과정과 현황분석』.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차보고서.
- 임방현 (1968). 전문기자론-사회적 기능의 분업·전문화와 신문의 구실. 『신문평론』, 1968년 12월호, 24~27.
- 임방현 (1969). 언론인 자가비판-저항과 자학에서 독립으로. 『정경연구』, 1969년 4월호, 133~139.
- 임영호 (2007). 언론인의 직업모델과 전문성 문제. 『민주화 이후의 한국언론』 (233~281쪽). 서울: 나남.
- 임중반·천관우 (1971). 창조 인터뷰-지성의 사회적 실천. 『창조』, 1971년 9월호, 18~31.
- 장용호 (1995). 한국 신문산업의 구조변동. 유재천 (외), 『한국 사회변동과 언론』 (15~49쪽). 서울: 소화출판사.
- 장윤환 (2013). 동아일보와 박정희와 나. 윤활식·장윤환 (외), 『1975-유신 독재에 도전한 언론인들 이야기』(22~55쪽). 서울: 인카운터.
- 장은미 (2006). 『1950년대 한국 신문의 남성적 재공간화 과정』.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인성 (1999). 유신의 아이덴티티와 문명: 메이지 유신의 분석틀. 『한국정치학

- 회보』, 33권 2호, 264~266.
- 정범준(2007). 『이야기 관훈클럽』.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 정영애(1969). 전국 여기자 의식조사. 『신문평론』, 1969년 9월호, 1~18.
- 정진석(1995). 『인물 한국언론사』. 서울: 나남.
- 정진석·김영성(1970). 한국 언론인의 급료 실태. 『저널리즘』, 3호, 135~143.
- 조세형(1964). 기자직은 직업화되어야 한다. 『신문평론』, 1964년 4월호, 28~30.
- 조세형(1966a). 신문·신문인·독자. 『정경연구』, 1966년 10월호, 131~137.
- 조세형(1966b). 한국 신문 기자론. 『신문연구』, 11호, 44~48.
- 주동황(1993). 『한국정부의 언론정책이 신문산업의 변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지재원(1988). 『한국 신문사의 출판사업 실태와 전망에 관한 조사-중앙 6개 일간지의 잡지 출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차배근(1980). 기자의 전문화 교육 실태와 방안. 『신문과 방송』, 1980년 6월호, 14~37.
- 차재영(2014). 1950년대 미국무성의 한국 언론인 교육교류 사업 연구. 『한국언론학보』, 58권 2호, 219~245.
- 천관우(1962). 단간제 이후의 신문. 『사상계』, 1962년 12월호, 195~201.
- 천관우(1971). 언론인으로서의 단재. 『나라사랑』, 3집, 28~35.
- 최 준(1965). 해바라기 신문론. 『신동아』, 1965년 9월호, 269~275.
- 최규장(1972). 기자론-오늘의 한국기자 자화상. 『신문연구』, 13권 1호, 45~60.
- 최석채(1962). 혁명하의 언론과 금후. 『사상계』, 1962년 3월호, 33~39.
- 최석채(1968). 신문이 편집인의 손을 떠났다. 『기자협회보』, 1968년 12월 27일자.
- 최이숙(2009). 『산업화시기(1961~1987) 성별화된 뉴스생산노동과 여성언론인의 정체성 관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편집실(1969). 인사와 급료 면에서 본 기자의 권익. 『저널리즘』, 1호, 53~60.
- 한국기자협회(1975). 『기자협회 10년사』. 서울: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1994). 『기자협회 30년사』. 서울: 한국기자협회.
- 한국신문협회(1982). 『한국신문협회』. 서울: 한국신문협회.

- 한국일보 74노조 출판위원회 (2005). 『유신치하 한국일보 기자노조 투쟁상-1974년 겨울』. 서울: 미디어집.
- 홍승직 (1972). 『지식인의 가치관 연구』. 서울: 삼영사.
- 홍종인 (1970), 개척자다워야 할 신문 기자상, 『신문연구』, 16호, 1~8.
- Carey, J. W. (1969). The Communication Revolution and the Professional Communicator. In P. Halmos (Ed.) *The Sociological Review Monographs. No. 13: The Sociology of Mass Media Communicator*. 23~38.
- Curran, J. (1979). Capitalism and Control of the Press, 1880~1975. In J. Curran, M. Gurevitch and J. Woollacott. (Eds.),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pp.109~146). Beverly Hills: Sage.
- Dicken-Garcia, H. (1989). *Journalistic Standards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Fedler, F. (2000). *Lessons from the Past: Journalists' Lives and Work, 1850~1950*. Prospect Heights, Illinois: Waveland Press.
- Habermas, J. (1987).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T. Burger Trans.). Cambridge: The MIT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62).
- Hallin, D. C. (1985). The American Mass Media: Critical Theory Perspective. In J. Foster (Ed.) *Critical Perspective and Public Life* (pp.121~146). Cambridge: The MIT Press.
- Hart, D. J. (1980). Changing Relations between Publishers and Journalists: An Overview. In A. Smith (Ed.), *Newspaper and Democracy* (pp.268~287). Cambridge: The MIT Press.
- Mancini, P. (2005). Is There a European Model of Journalism? (pp.77~92). In H. de Burgh (Ed.), *Making Journalists: Diverse Models, Global Issues*. London: Routledge.
- Nerone, J. C. (1987). The Mythology of the Penny Press.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4, 376~404.
- Schiller, D. (1979). An Historical Approach to Objectivity and Professionalism in American News Reporting. *Journal of Communication*, 29(4), 46~57.
- Schudson, M. (2005). The U. S. Model of Journalism: Exception or Exemplar?. (pp.94~105). In H. de Burgh (Ed.), *Making Journalists:*

*Diverse Models, Global Issues*. London: Routledge.

Smith, A. (1979). *The Newspaper: An International History*. 최정호·공용배  
역(1990). 『세계 신문의 역사』. 서울: 나남.

Tunstall, J. (1974). *Journalist at Work*. Beverly Hills: Sage.

## Abstract

# Changes in Professional Identity of Journalists During the Park Chung-hee Regime

**Yong-Gyu Park**

Professor, Division of Media & Advertising, Sangji University

Immediately after the 5-16 coup, the Park Chung-hee regime started trying to constrict any critical activities of journalists and they were willing to support the press to grow as an enterprise. This industrialization of newspaper only intensified the internal control of owners, and that eventually led the journalists to be suffered from low wages and job insecurity. Such of those external and internal controls drove any critical contents out, and that caused the development of readers' critical ideas about the press. As they always got watched for their journalistic activities and were never been guaranteed for occupational rights and interests, the journalists sneered at themselves for becoming one of those 'salaried men.' That consequently encouraged them to make attempts to 'form a labor union' and to 'search for professionalization.' However, those attempts did not make it to any satisfactory result because of the suppression from the government and the owners of the press, the journalists' lack of competence. But, despite the failure, what the journalists went through during the Park Chung-hee regime did have an influence on the journalists' trying to build a desirable identity.

**KEYWORDS** journalist • professional identity • press union movement • professionalism • Park Chung-Hee Regime